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한수산



새해 첫날의 일이었다. 얼어붙은 길에 차가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뒷바퀴가 헛돌며 비실비실 미끄러져 내려가던 차는 드디어 길 옆 개울가에 처박힐 듯 아슬아슬하게 멈춘다. 미사 시간은 십여 분 앞으로 다가오는데 성당을 눈앞에 두고 차가 움직이지를 못하니 이를 어쩔 것인가. 새해 첫 미사를 천주교 성지에서 드리기 위해 충북 진천의 깊은 산 속까지 찾아왔는데 자동차가 새해 첫날부터 너 죽고 나 죽자 아닌가.

것도 없다. 바로 이곳 배티성지의 김웅렬 신부가 한 표본이 될 수 있다. 김 신부가 감곡성당을 맡아 성모님을 위한 성지로 가꾸어 가면서 전국에서 감곡 매곡성당(매곡은 장미꽃이라는 뜻)을 찾는 천주교 순례자가 하루 4000명을 넘는 날도 있었다. 한 성당을 찾아 조그만 지방 도시에

냉수 먹고 갈비 트림

4000명이 몰렸다면 이런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수치로 이야기할 일이 아니다. 고속도로 볼케이트의 수익만도 얼마였겠는가. 그래서 김 신부가 감곡을 떠나 이곳 배티성지로 부임하게 되었을 때 감곡의 식당주인과 택시기사가 '신부님이 가시면 우리는 어찌나'고 했다는 일화까지 전해진다. 문화의 힘이 무엇인가를 드러내 보여주는 좋은 예의 하나다.

지역의 고유한 문화유산들을 새롭게 조명하고 다듬어서 가리는 정책은 아름답기까지 하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정신도 서구중심주의에서 벗어나 고유문화와 제3세계의 지역문화에 눈을 돌리는데서 시작하지 않았던가. 문제는 그 문화재의, 그 가치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사례 깊은 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표현을 달리하자면 문화재를 개발한다면 어디나 똑같은 형태의 쉼터, 벤치와 계단, 연못과 오솔길이 조경업자에 의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문화재로 지정된 후 천주교 성지조차 곳곳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화려한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이 변신이 훼손에 가깝다. 이름도 없이 스러져가야 했던 무명순교자

들을 가리며 담백했던 옛 사직지가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공원처럼 쉼터가 되어가고 있다.

배티가 이제 또 문화재로 지정된다는 것이다. 이곳은 한국의 두 번째 신부인 최암업 토마스 신부가 1년이면 7000리를 걸어서 전국을 돌며 12년간 사목활동을 했던 거점 마을 교우촌이었다. 이곳 산골짜기에는 지금도 무명 순교자의 줄무더기 이름 모를 들꽃처럼 피어 있다.

이런 종교적 의미만이 아니다. 이곳은 최초로 천주교 조선교구의 신학교가 설립되었던 곳이다. 두 칸짜리 초가집이 신학교 교사로 자리 잡고, 신학은 물론 라틴어와 프랑스어라는 최초의 서양학문과 언어를 익히는 교육이 이루어졌고 그렇게 해서 1854년 3월에는 세 명의 신학생이 말레이시아의 페낭신학교로 유학을 떠나게 된다. 이토록 역사적 가치가 깊은 곳이다.

한 시대를 앞서 간 선각자적 눈뜸이라는 배티성지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내일의 지표로 삼는 것은 더할 수 없이 가치 있는 일이다. 일차적으로는 사적지 담당자의 양식의 문제이겠지만, 이 가치 있는 일이 그 가치의 완성도를 더욱 높이는 쪽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자체 담당자들이 마음을 기울여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미사를 끝내고 나오며 바라본 배티성지의 산기슭은 눈이 덮인 채 얼어붙어서 가슴이 시리도록 희고 아름다웠다. 볼수록 려두려운 승용차가 떠올랐다. 이 깊은 산골짜기에서 개울가에 처박힐 듯 기울어져 있는 내차는 어쩔 것인가. 지자체의 문화정책이 문제가 아니다. 우선 내 코가 석자로구나. 내가 지금 새해 첫날부터 냉수 먹고 갈비 트림하는 꼴이 아닌가.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료 칼럼

허정



옛날부터 자손을 많이 낳는 것은 오복 중의 하나이며, 가문을 번성시키는 제일 첫 번째 일이었다. 며느리가 자식을 낳지 못할 때는 칠거지악의 하나로 여겨 친정으로 보내기도 하는 잘못된 관습이 근세까지도 내려오기도 했다. 특히 인간의 수명이 채 40세를 넘기지 못했으며, 각종 질병 및 과잉이 만연한데다 출산으로 인한 산모 및 영유아 사망률이 높아 자손을 번창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였다. 그래서 10세를 조금 넘는 나이에 조혼하는 풍습이 생기고 우리 어릴 때 꼬마 신랑이라는 코믹한 영화를 보면서

기아 출산율을 여성 한 명당 1.15정도로 떨어뜨렸다. 더욱이 교육연한이 늘어남에 따라 장 및 사회진출이 늦어져 결혼 연령이 30년 전에 비해 4~5세가 늘어났으며 초산 출산 연령이 30세가 넘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의학적인 견지에서 가장 적정한 첫 번째 출산연령은 24~26세인데 현재 평균 첫 번째 출산연령이 30세를 넘은 상태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두 번째 출산 연령이 35~40세를 넘기는 등 산모의 고령화에 따른 많은 위험인자를 내포하고 있다.

산모의 고령화 문제

조선시대의 삶을 엿보기도 했다. 더욱이 각종 전란과 노역 착취, 농경 사회로 인한 노동력의 필요성 탓에 아들을 선호하면서 최근까지도 남아 선호사상이 우리 사회를 압도하기도 했다.

산모의 고령화는 첫째로 임신(산태)의 저하 및 불임의 증가가 심하며, 둘째는 산모의 난산 및 제왕절개술뿐만 아니라 고혈압, 임신성 당뇨 등 임신병의 증가로 자궁내 태아 발육이나 기형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셋째로 자궁근종 자궁경부암 등의 질환이 30대 후반에서 임신과 동반함으로써 자궁내 태아 발육 및 출산에 큰 위험이 되고 있다. 넷째로 출산 후 육아 문제에 있어서도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또 다섯째로 산모의 고령화는 염색체 변이로 인한 다운증후군 등 태아 기형을 유발하기도 한다. 여섯째 고령산 모로 인한 미숙아의 증가는 신생아의 발육부진 및 각종 장애 증가의 요인이 되어 가정 및 사회적 커다란 부담이 된다.

그러나 6·25 전쟁 후 예비비범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 증가는 심각한 식량난을 야기하고 급기야 70년대부터는 두 자녀 낳기 운동과 가족계획이라는 이름 하에 강력한 인구증가 억제정책을 병행 부적으로 시행했다. 또한 세 번째 분만은 의료보험 혜택을 주지 않는 등 지금 생각하면 10년을 내다보지 못하는 정책을 밀어붙이기도 했다.

이 같이 고령화 산모의 증가는 저출산 문제와 함께 어느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범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특히 국가나 지자체는 산전 및 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등 고령 산모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정책적인 배려를 확대해야 한다.

(에덴병원장)

기고

이상식



최근 자동차 운전면허제도가 간소화되는 방안으로 국무회의에서 보고되었다고 한다.

이미 지난해 2월24일 자동차 운전면허제도가 1종 기준에서 2종 및 도로교통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35시간에서 25시간으로 간소화됐다. 그런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그 결과를 분석하기도 전에 기능시험을 없애고 실기 의무교육을 8시간으로 단축 변경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자동차 사고의 증가가 불을 보듯 뻔한 제도 개선은 강행하려는 의도를 알 수 없다.

필자는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을 옹호하거나 살피우자는 것이 아니다. 자동

이러한 자동차 운전면허제 시험에서 기능시험을 없애려는 것은 정부의 입장(행정안전부)이며, 법 개정의 요건과 절차에 의해 국회에서 하반기경에 결정될 예정이다. 진정으로 국민이 원하는 안전은 무엇인지 국회 의결을 지켜봐야 하겠다.

2007년부터 3년간 청소년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분석한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며 사고 유형별로 무면허 48.7%, 운전미숙 등이 37.8%, 음주운전이 13.5%로 집계되어 경찰청에서도 청소년들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은 안전운전 교육을 강화해

자동차 운전면허제 이래도 좋은가?

차 운전면허 제도는 더욱 강화되고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안전에 중점을 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면허 취득 후 10시간 연수로 보충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은 탁상행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동차보험에서 대인 I 보험은 강제성이 있어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많은 자동차 소유자가 강제보험인 대인 I 보험은 가입하나, 임의보험인 대인 II, 대물보험은 가입하지 않아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어느 한도 이상은 보상받을 수 없어 제도의 보완이 절실히 요구되어 왔다. 이에 따라 대인 I 보험의 책임 한도가 확대되고 일정한 한도의 대물도 보상되도록 보험료가 인상되었다. 임의 보험은 많은 자동차 소유자가 가입하지 않고 강제 보험인 대인 I 보험만 가입하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현실을 직시할 때, 보험료 인하를 전제로 한 연수가 얼마나 활성화될지 의구심이 앞선다.

나아가 한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들 주변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잊지 못할 악몽으로 불구나 사망에 이른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이 있을 것이다.

자동차 사고는 고의가 아니며 운행 중 언제나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엑셀과 브레이크를 밟았다 놓았다 하는 단순하게 조작보다는 자동차의 기능을 습득하고 인지, 판단, 조작하는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며 교통법규 및 운전예절이 선행되어야 갈수록 복잡해지는 도로에서 방어 운전과 양보운전으로 명량한 운전 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자동차는 우리들의 생활에서 편리한 도구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설부터 운전면허증이 우리들이 원하지 않는 흉기로 변해 우리들을 구속할 것이다.

“빨리빨리” 물론 빨리 해야 할 일도 있다. 그러나 부실을 감안하지 않는 건축공사나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빨리는 결국 사망선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잃을 수 있으며 부상과 장애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도로교통 안전관리자>

소규모 지게차 농업용 활용토록 가격 낮추면

겨울철 농촌 들녘을 지나다 보면 하얗게 쌓인 거대한 밧짚 더미를 쉽게 볼 수 있다. 이것은 가을에 벼 수확을 끝내고 밧짚을 모아 밀봉 처리한 곤포라는 것이다. 곤포는 한 겨울부터 다음해 봄까지 소 등 가축의 사료가 된다.

곤포는 지름이 2m에 달해 축사로 옮기려면 트랙터나 지게차와 같은 중장비가 필요하다. 농촌에서 지게차는 무거운 쌀가마는 물론 사료용 건조터미, 크고 무거운 곡물 포대의 이동에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시설원예농가에서도 농작물을 출

하하거나 각종 농자재를 운반할 때에도 일괄작업을 할 수 있어 지게차의 활용도는 매우 높다.

하지만 지게차는 현재까지 농업용기계 아닌 일반 중장비로 등록돼 있다. 때문에 많은 농가에서 지게차를 필요로 하지만 워낙 비싼 가격 때문에 구입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 정부는 농가에서 활용도가 높은 3톤 이하의 소규모 지게차를 농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줘야 할 것이다.

▲유영방·광주시 동구 소재동

시설

정부 지원 없는 '공항 통합' 합의 의미 없어

국토해양부가 최근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을 통해 무안공항과 광주공항의 통합 방침을 재확인했다. 광주공항의 국내선 이전 및 통합 시기에 대해서는 호남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지자체 간 합의'라는 전제조건으로 달아 '선 지역 협의, 후 통합'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지역의 여론을 의식해 '합의'를 내세운 듯 하지만 속내는 합의가 안 되면 국토부도 한 발을 빼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광주공항의 국내선 사수와 이전을 고집하고 있는 광주시와 전남도 간에 협찬한 갈등이 우려되는 것이다.

또한 이번 종합계획에는 금년부터 5년간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에 대한 신규 투자와 지원이 아예 없는 것으로 돼 있다. 여기에서 2014년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될 경우 국내선 수요가 최고 67% 이상 감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무런 대책도 없는 실정이다. 이대로 가다간 광주·무안공항 모두 공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지역의 중요 국가기반시설인 공항에 5년 동안 아무런 투자나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어떤 이유든 납득되지 않는다. 공항 통합을 놓고 광주시와 전남도가 마찰을 빚자 그 원인을 제공했던 정부가 이를 교묘히 이용해 뒷감만 지겠다는 격이다.

정부가 지난 2007년 무안공항 개항 시 제주공항에 버금가는 국제공항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지킨 것은 하나도 없다. 광주시가 광주공항 이전을 적극 반대하는 이유로 정부의 잘못된, 무책임한 공항정책에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광주와 전남도는 이제 공항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접어야 한다. 그 마찰은 지역 발전의 저해는 물론 정부의 신규 투자 소외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케도 수정이 필요한 것이다. 정부가 투자를 외면하는 마당에 공항 통합 논의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서로 지혜를 모아 상생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광주·전남 언제까지 '기상이변' 탓만 할 건가

연말연시 기상이변으로 광주·전남지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4일 동안 눈폭탄이 강타해 교통이 마비되고, 시설 농작물에 엄청난 피해를 줬다. 또한 최근 성탄절 연휴에는 30여 년 만의 한파가 몰아쳐 광주·전남 전역을 꽁꽁 얼어붙게 했다.

지난해는 유독 기상이변이 잦았다. 한창 따듯해야 할 3월 하순부터 4월 말까지는 이상 저온 현상으로 봄이 실종됐고 여름에는 불발더위가 이어졌다. 8월 한 달 동안에는 이례적으로 태풍이 3개나 상륙하는 바람에 피해를 봤고, 가을에는 때아닌 집중호우로 곳곳에서 물난리가 일어났다. 이제 우리나라도 기상이변이 더 이상 이변이 아닌 것이다.

하지만, 광주·전남 지자체의 기상이변 대응은 여전히 주먹구구식이다. 최근 폭설은 지역 재난방지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 지 여실히 드러냈다. 광주시와 전남도, 각 기초지자체의 능동 대응과 안전한 대처가 5년 만에 내린 폭설을

재해로 키운 것이다. 30cm 안팎의 폭설이 지역을 덮쳤지만 제설작업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지역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에서 각종 사고가 잇따라 많은 인명피해를 냈다. 특히 이면도로 곳곳은 거의 방치돼 '재앙의 길'로 변화다시피 했다.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제설 작업에 나서는데 등 뒤늦게 부산을 편 지역재난방지시스템은 낙제점이었다.

급작스런 기상이변 상황에서 지역민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은 행정당국의 신속하고 투명한 대응뿐이다. 도로와 시내버스 등 교통수단에 대한 철저한 통제와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이제 광주·전남지역도 기상이변의 예외지대가 아니다. 폭설이든 폭우든 자연재해는 대비가 부족하면 대형 피해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지역 각 지자체는 재난방지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 여기에 성숙한 시민의식이 더해져야 함은 물론이다.

無等鼓

토끼몰이는 생각만큼 쉽지 않다. 앞다리가 짧아 높은 곳에서 낮은 데로 물면 된다지만, 단 몇 번의 도약만으로도 수풀 속으로 숨어버리기 일쑤다. 중화고 시절 겨울이면 전교생이 동원돼 토끼몰이를 하곤 했는데, 덩치가 큰 노루나 고라니가 대신 걸러줄 때가 더 많았다는 기억이다.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먹히는 야생에서 토끼는 초라한 존재다. 기린처럼 키가 큰 것도 아니고, 호랑이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지도 못했다. 풀이나 뜯는 미물일 뿐이다.

그래도 생존방법은 있다. 빠른 발과 뛰어난 청각, 영리한 두뇌, 왕성한 번식력이 무기가. 옛 이야기에 나오는 토끼는 청산유수와도 같은 언변까지 갖췄다. '수궁가' 토끼 배 가르리는 대목을 보자. '토끼가 생각하니 저놈한테 잡혀 속절없이 끌려와서 꼭 죽게 되었구나' 한 괴를 얼른 내어 배를 의심 없이 척 내밀며 자아내~배 따 보시오/ 용왕이 생각하기

를 저놈이 안따일라고 무수히 잔말이 심할 터인데 저리 의심 없이 배를 척 내미는 것이 필유곡절(必有曲折)이로구나.

용왕의 병을 고치는 약으로 간을 빼앗길 위기에 몰린 토끼가 주도권을 잡는 순간이다. 토끼는 간을 시도 때도 없이 뺄 수 있다는 번설을 속사포처럼 늘어놓는 심공을 발휘한다. 권력은 제 목숨을 위해 남의 생명을 요구하지만 토끼는 빼

놓은 간을 가지고 오겠노라며 유유하 옹골을 빼져나온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언급한 '토끼몰이 전략'으로 정치권이 시끄럽다. 김 원내대표는 옛그제 "산토끼 잡으러다 집 토끼까지 잃어버린다"며 민심이란을 격

정하는 수도권 의원들을 겨냥했다. 반격이 없을 수 없다. "집토끼만으로 선거를 이긴 적 없느냐"는 것이다.

졸지에 토끼가 된 국민은 간도 쓸개도 내놓을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용공의 어전회의처럼 자기들끼리 치고받는 꼴이 우습다.

/김주석 여론매체부장 jnews@

토끼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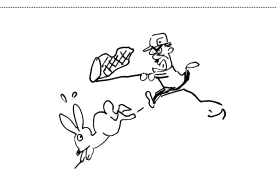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평론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